

고령사회 한국의 사회정책 방향

Social Policies for an Aging Korea

1. 서론

출생, 사망, 인구이동 등의 인구변동은 제반 사회경제적 변화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선진사회가 보여 준 바와 같이 한국사회는 국민소득의 증대, 교육수준의 향상,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확충,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양적 증대,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 증대 등 사회경제분야 전반에 걸쳐 현격한 발전을 이룩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출산율과 사망률의 감소로 이어졌다.

결과적으로 전체인구 대비 노인인구의 비율은 2018년에는 고령사회(14%)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20%)에 도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결과는 고령화 사회(7%, 2000년 기도달)에서 초고령사회로의 진입기간이 26년에 불과한 것으로 프랑스의 156년, 영국의 92년, 미국의 86년, 독일의 80년, 일본의 36년 등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빠른 속도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으로 인하여 식자(識者)들은 '늙어가는 사회', '광속(光速)의 고령화', '고령화 쇼크', '고령화 시



김 승 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한폭탄', '고령화 재앙', '시니어 붐(boom)' 등 다양한 수식으로 인구고령화의 위력을 예고하고 있다. 그만큼 인구고령화는 우리 사회에 미치는 충격이 클 것이며, 이에 대비하지 않으면 지속가능발전이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존재여부가 불확실해질 우려가 높다.

선진국에서는 벌써부터 노동력 부족, 사회보험제도의 개혁, 과도한 복지비용지출로 인한 재정부담 등을 경험하고 있다. 이들 국가가 겪는 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를 보면서 고령화 속도가 훨씬 빠른 한국사회에 시사하는 점이 무엇인지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다양한 가정에 의하여 장래인구추계를 하더라도 젊은 인구의 엄청난 숫자의 유입이 없는 한 한국이 고령사회의 부담을 외면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고 고령화를 무작정 재앙(災殃)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으며, 위기를 기회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따라서 본고는 고령사회 도래의 원인을 규명하고, 향후 고령사회의 실태 및 사회경제적 영향을 검토하며, 그리고 고령사회에서의 사회정책 방향으로서 적응을 위한 방안과 지연을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같은 방안은 궁극적으로 위기극복의 방편임과 동시에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하고 세대(世代)를 초월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2. 고령사회 도래의 원인과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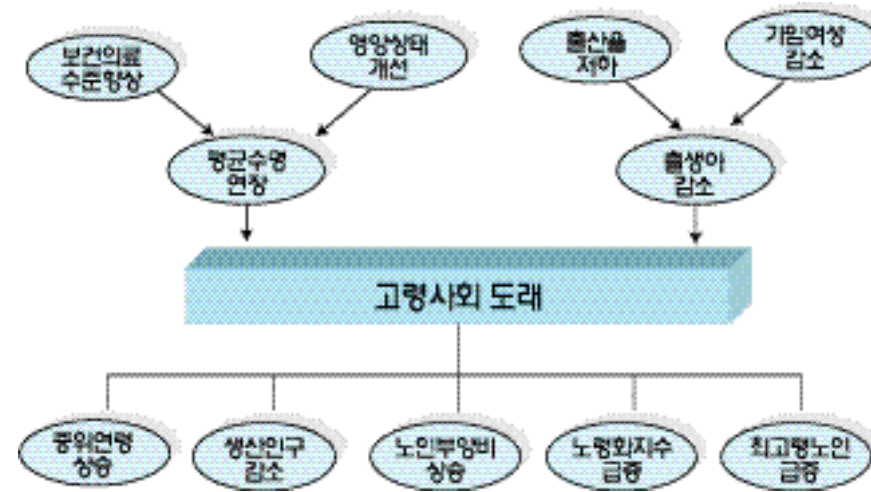
한국사회의 급속한 고령사회의 도래원인과 실태를 간략히 요약하면 (그림 1)과 같이 제시된다.

1) 고령사회 도래의 원인

한 사회의 인구가 고령화되는 것은 국외 이입자, 전쟁 및 전염병에 의한 과다사망 등의 외부요인을 통제할 경우 평균수명의 연장과 출산율의 저하, 그리고 가임여성의 감소가 주요 원인임은 보편적 현상이다. 이는 한국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보건의료수준의 향상 및 영양상태의 개선에 의한 평균수명의 연장과 출산율 저하 및 가임여성의 감소에 의한 빠른 속도의 출생아 감소는 급속한 고령사회로의

이행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그림 1. 급속한 고령사회 도래의 원인과 실태



(1) 평균수명의 연장

2005년 현재 우리나라 평균수명은 77.9세로 선진국 평균수준(76.2세)에 웃도는 수준이나 일본(82.1세), 이탈리아(79.0세) 보다는 낮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20년에 약 81.0세에 도달하여 선진국 평균(78.4세)보다 높아질 전망이며, 이러한 격차는 계속 유지되어 2050년에 이르면 약 83.3세로 선진국 평균(81.6세)보다 높아질 전망이다.¹⁾

(2) 출산율의 저하

여성 1인당 합계출산율은 1960년의 6.0명에서 1983년 인구대체수준인 2.1명에 도달하였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저하되어 1996년에는 1.71명에 도달하였다. 이와 같이 선진국에서 100여 년이 소요되었던 출산력 전환이 한국사회에서는 불과 25년이라는 단기간에 이루어져 높은 성과를 거양한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1) 평균수명의 가정은 우리나라 평균수명 증가속도를 Logistic, Gompertz 모형 및 UN, 일본의 평균 수명의 증가속도를 비교하여 최적값을 선택한 것임.

표 1. 평균수명 추이

(단위: 세)

연도	계	남자	여자
2000	75.87	72.06	79.50
2010	79.06	76.17	82.60
2020	80.98	78.22	84.41
2030	81.86	79.18	85.22
2040	82.64	80.02	85.95
2050	83.26	80.67	86.59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2005. 1.

그런데 IMF(국제통화기금) 관리 하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까지 저하되어 향후 인구변동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최근 출산율 급락의 원인은 미혼율의 증대와 기혼부부의 소자녀 선호 등이 요인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전자는 청년실업, 불안정한 직장, 사회제도적 불평등 등으로 야기되는 비자발적 미혼으로 인하여 결혼에의 접근이 어려운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가치관의 변화, 포스트모더니즘 등에 의하여 결혼을 기피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후자의 경우는 자녀가치관의 변화, 양육비, 공·사 교육비 등에 의한 자녀양육부담 증가, 출산당사자인 여성의 '가정생활과 직장생활 병행'이 어려운 사회적 여건 등 자발적 및 비자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데 기인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김승권 외, 2002, 2003).²⁾

(3) 가임여성인구의 감소

가임여성(통상적으로 15~49세 여성을 의미)은 인구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데, 이는 출생아수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인구가 약 27년 후³⁾에 다시 출산(재생산)을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2003년부터 우리나라의 가임여성인구가 감소되

2) 김승권 외,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장단기 정책방안」,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김승권 외, 「저출산 대비 인구정책 개발 및 범정부추진체계 수립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3) 이는 현재 한국여성의 평균 초혼연령을 기준으로 가정 한 것이며, 향후에는 다소 상승될 가능성이 있음.

기 시작하였음은 인구변동, 특히 고령사회로의 이행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이라 하겠다.

가임여성의 연령층별 규모변화를 추정된 결과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표 2 참조). 따라서 출산율이 다소 상승할지라도 출생아수는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최근의 낮은 출산율 영향을 강하게 받아 향후에는 더욱 큰 감소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므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표 2. 가임여성층 인구의 연령별 변화추이(출산율 중위수준 가정)

(단위: 천명)

연령	2000	2010	2020	2030	2050
15~19	1,855.4	1,594.3	1,173.0	993.2	736.2
20~24	1,864.5	1,439.5	1,466.8	1,060.9	833.7
25~29	2,120.8	1,839.4	1,577.5	1,164.2	871.3
30~34	2,071.1	1,858.9	1,435.2	1,463.1	881.1
35~39	2,092.5	2,106.3	1,826.2	1,567.3	977.4
40~44	1,975.3	2,044.2	1,836.5	1,418.6	1,047.0
45~49	1,438.3	2,063.0	2,077.4	1,802.6	1,139.7
계	13,417.9	12,945.6	11,392.5	9,469.9	6,486.3

자료: <표 1>과 동일

2) 고령사회의 실태

급속한 출산율 저하에 따라 통계청에서는 2005년 1월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발표하였다. 동 추계는 코호트요인법(Cohort Component Method)에 의한 것으로 기준인구에 성·연령별 인구변동요인인 출생·사망·국제이동에 대한 장래 변동을 추정하여 이를 조합하는 방법이다. 추계에 관련된 주요 인구지표는 인구증가율, 출산율, 사망률 평균수명 등이다.

고령사회 인구의 주요 특성은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즉, 중위연령의 상승, 생산인구의 감소, 노인부양비의 상승, 노령화지수의 급증, 그리고 80세 이상 초고령노인의 급증 등인데, 이들 특성을 다음과 같이 간략히 설명한다.

(1) 중위연령의 상승

출생아 감소 및 노령화 진전으로 중위연령은 2000년 31.8세에서 2006년 35.4세로 높아졌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20년 이후 선진국보다 높아져 2020년 43.7세, 2030년 49.0세, 2040년 53.1세, 2050년 56.2세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전체 국민의 평균연령이 높아지는 것으로 젊은 연령층의 감소와 고령 인구의 증가를 의미한다.

표 3. 중위(Median)연령의 변화추이

(단위: 세)

연도	한국	선진국
2000	31.8	-
2006	35.4	-
2010	37.9	40.3
2020	43.7	42.3
2030	49.0	44.2
2040	53.1	-
2050	56.2	45.2

자료: <표 1>과 동일

(2) 생산인구의 감소

15~64세 생산인구는 2016년 3,649만 6천명으로 최대규모에 도달한 이후 매 10년마다 약 400만의 생산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2050년에는 2,275만 5천명에 불과할 전망이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현실적으로 실제 생산인구로 볼 수 있는 연령계층인 25~49세의 인구는 2007년 2,082만 5천명으로 절정에 도달한 이후 2008년부터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 연령층 인구는 2020년 1,839만 5천명, 2030년 1,576만 3천명, 2040년 1,314만 9천명, 그리고 2050년 1,029만 5천명으로 매 10년 마다 약 200~300만명의 감소가 예측된다. 이는 고령사회의 인구학적 특성인 주 생산연령층의 감소가 눈앞에 닥쳤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현재의 실업률, 특히 청년실업은 금명간 해소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어서 인력난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표 4. 생산인구의 연령층별 변화추이

(단위: 천명)

연도	계	15~24세	25~49세	50~64세
2000	33,702	7,697	19,816	6,189
2007	35,089	6,565	20,825	7,699
2010	35,852	6,468	20,428	8,956
2016	36,496	6,430	19,053	11,012
2020	35,838	5,547	18,395	11,897
2030	31,892	4,266	15,763	11,863
2040	27,084	3,636	13,149	10,299
2050	22,755	3,235	10,295	9,225

자료: <표 1>과 동일

(3) 노인부양비의 상승

생산인구대비 노인인구를 나타내는 노인부양비는 2006년 13.2%에서 2020년 21.8%, 2030년 37.3%, 2050년 69.4% 등으로 급속한 증가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저출산 현상으로 인하여 유년부양비는 다소 감소된다 하더라도 노년부양비의 증가폭이 더욱 크기 때문에 생산인구가 부담하는 총부양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전망이다. 즉, 총부양비는 2006년 39.1%에서 2040년 72.6%로 약 두배 증가하게 될 것이며, 2050년에는 86.1%에 달하게 되어 생산인구 한명이 2050년에는 약 0.86명의 부양인구를 갖게 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러한 경향으로 노인 1명을 부양하여야 할 생산인구를 의미하는 잠재적부양비(potential supportive ratio)는 현재의 8명에서 2022년 4명, 2037년 2명, 그리고 2066년에는 1명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표 5. 부양비의 변화추이

(단위: %)

연도	총부양비	유년부양비	노년부양비
2000	39.5	29.4	10.1
2006	39.1	25.9	13.2
2010	37.3	22.3	14.9
2020	39.4	17.6	21.8
2030	54.7	17.4	37.3
2040	72.6	17.4	55.2
2050	86.1	16.7	69.4

자료: <표 1>과 동일

(4) 고령화지수의 급증

0~14세의 유년인구대비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를 나타내는 고령화지수는 장래 사회의 성장잠재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요성을 갖는다. 동 지수는 2006년 50.9%에서 2020년 124.2%로 높아질 것이며, 이후 매 10년 마다 약 100%포인트 상승하여 2050년에는 415.7%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50년에는 유년인구보다 4배 이상이 많은 노인인구가 있을 것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이 당분간 지속된다면, 생산인구가 감당해야 할 노년부양부담은 엄청난 수준에 도달할 것임을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고 하겠다.

표 6. 고령화지수의 변화추이

(단위: %)

연도	노령화지수
2000	34.3
2006	50.9
2010	66.8
2020	124.2
2030	214.8
2040	316.6
2050	415.7

자료: <표 1>과 동일

(5) 초고령노인의 급증

80세 이상 초고령노인인구는 2006년 72만 9천명에서 2020년 187만 7천명으로 증가하고, 2050년에는 585만 9천명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즉, 노인인구대비 초고령노인인구의 비율은 2006년 1.5%에서 2020년 3.8%, 2050년 13.8%로 빠른 속도의 증대추세를 보이게 된다. 초고령인구의 증가는 소득의 사회의존도가 높고, 심각한 질병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계층이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영향이 더욱 크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표 7. 80세 이상 초고령노인의 인구 및 비율

(단위: 천명, %)

연도	80세 이상	노인인구 대비 비율
2000	483	1.0
2006	729	1.5
2010	969	2.0
2020	1,877	3.8
2030	2,711	5.5
2040	4,450	9.5
2050	5,859	13.8

자료: <표 1>과 동일

3. 고령사회의 사회경제적 영향

한국 사회에서의 출산율 저하는 단기간에 이룩되었기 때문에 인구규모의 감소와 인구구조의 불안정에 따라 사회경제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총인구의 변화와 인구구조(유년인구, 생산연령인구, 노인인구)의 변화, 그리고 인구의 성별구조 등의 중장기적 변동은 국가경쟁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 특히 최근 인구변동요인이 급변함에 따라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인구고령화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고령사회의 도래는 국가경쟁력의 약화와 장기적 경기침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인구고령화와 인구규모의 감소, 특히 생산인구의 감소는 생산력이 약화되고, 투자가 감소되며, 고용창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가 전반적으로 침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 떠오를 몇 가지만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국가경쟁력 약화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로 인해 우리나라 국제경쟁력이 중국 등 아시아 국가뿐만 아니라 대부분 OECD 국가들에 비해 약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OECD에 의하면, 인구고령화는 향후 수십년간 일인당 GDP성장률을 연간 0.25~0.75%포인트 감소시키는 효과를 초래할 것이라 한다. 이는 생산인구의 감소와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소비증대 및 저축감소, 투자감소, 고용창출 미흡 등의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2) 노인복지비용의 급증

사회에 대한 소득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노인인구의 증가, 특히 고령노인의 증가는 기초보장수급자를 절대적으로 증대시켜 국가재정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군다나 기초보장수급의무자의 축소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노후소득보장을 사회가 전적으로 부담해야하는 경우가 더욱 증대될 것임은 자명하다.

또한 노인인구의 증가로 노인을 위한 재가보호 및 시설보호 서비스 비용을 복지국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더군다나 80세 이상 초고령노인의 증가는 치매노인,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의 절대수가 급증하게 될 것이므로 의료비 상승과 복지비용증가는 불가피할 것이다.

3) 국민연금 재정부담의 증대

인구구조에서 노인인구 비율의 증가는 노년부양비를 증대시켜 공적연금 수급자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독일, 일본 등 많은 저출산 선진국에서는 공적연금제도가 인구구조 변화에 기인되어 제도의 근간을 흔들 정도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이미 연금개혁을 시도하고 있음에서 잘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연금

제도 도입시의 문제점과 급속한 출산율 저하로 인하여 어느 사회에서보다도 더욱 심각한 연금재정위기 상황에 내몰릴 위험요인이 자리 잡고 있다. 실제로 현행 국민연금체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실시된 연구에 따르면, 연금의 재정수지는 2035년에 적자로 반전될 것으로 전망되어 제도개혁이 필연적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노인인구 증가로 연금수급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저출산의 영향으로 연금가입자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향후 연금지출액이 연금수입액을 초과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국민연금제도의 개혁은 불가피하며, 개혁의 방향은 연금재정적자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더 많이 내고, 덜 받는 구조'로 이행될 수밖에 없다.

4) 건강보험 재정 불안정

의료비의 장래추계에서 선진국의 경험을 보면, 먼저 국민소득 수준이 증가하는 속도보다 의료비의 증가속도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어 왔으며, 의료비의 소득탄력성이 통상 1 이상이었다. 다음으로 노인의 의료비는 시간이 지날수록 젊은 층의 의료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증가하는 경향을 갖는다.⁴⁾ 총진료비 중 노인진료비의 비중은 2000년 17.4%, 2001년 17.8%, 2002년 19.3%, 2003년 21.3%, 2004년 22.8%, 2005년 상반기 24.2% 등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⁵⁾ 더군다나 80세 이상 초고령노인의 절대적 증가는 건강보험 재정수지의 불균형을 더욱 가중시킬 것임에 틀림없다.

전술한 사회보장비 지출증대와 함께 노인복지서비스 비용증대의 부담은 전적으로 생산연령인구에게 부가될 것이다. OECD 국가들은 1985년 이후 노년부양비 증가로 GDP 대비 사회복지재정지출의 탄성치를 1.46으로 추정하였고, 인구고령화로 인하여 재정지출규모는 경제성장보다 빠르게 진행된다고 한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복지지출규모는 2020년 14.5%, 2030년 20.6%로 급속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에서 고령사회가 생산인구에게 주는 부담이 어느 정도인가를 짐작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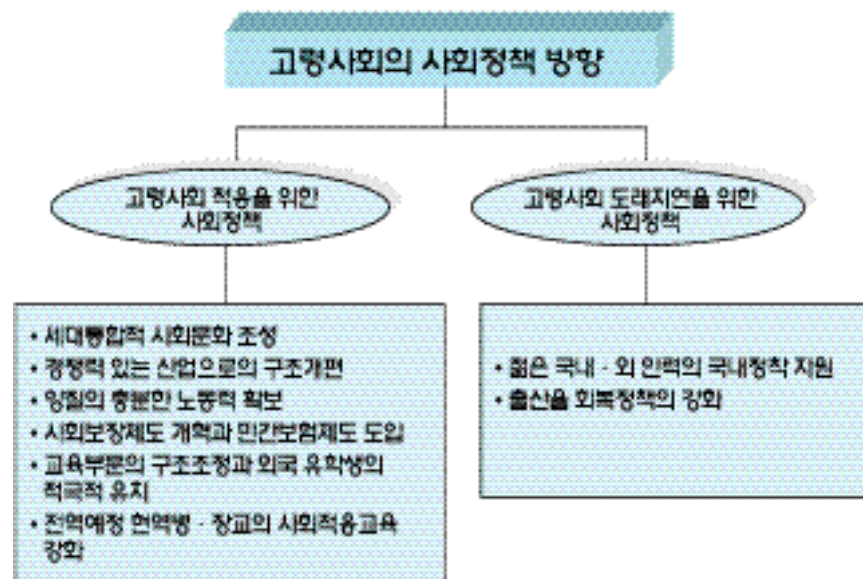
4) 김승권 외,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장단기 정책방안」,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5)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건강보험 주요 통계』, 연도별 자료.

4. 고령사회에서의 사회정책 방향

한국사회에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변동은 국가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하고 지속적 국가발전 및 사회경제적 발전의 위해요인이 될 것이며, 젊은 연령층의 엄청난 재정부담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고령사회에 대비한 대책은 어떠한지, 예측되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고령사회의 영향은 다양하며, 이를 위한 정책방향은 수없이 많을 것이나 본 고에서는 고령사회에의 적응과 고령사회의 도래 지연 등의 두 가지에 국한하여 핵심정책만을 논의하며, 다음 [그림 2]와 같이 간략히 제시한다.

그림 2. 고령사회의 사회정책 방향



1) 고령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정책

고령사회 적응방안은 고령사회의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고 고령사회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 국가발전이 지속가능토록 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한 주요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1) 세대통합적 사회문화 조성

공동체 가치관과 결혼 및 가족가치관을 강화하는 정책이 각급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세부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첫째, 공동체 가치관, 가족가치관 등을 증대시키기 위한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경로가치관의 강화로 노인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킨다. 셋째, 가족관계를 증진(promotion)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가족안정, 특히 세대간 안정을 적극 도모한다. 넷째, 3세대(世代)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문화를 조성하여 세대통합적 사회문화를 적극 지원한다.

이러한 정책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임에 유념해야 하며, 학교교육의 교과과정 편성에 포함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동 가치관의 정착을 위한 사회문화운동이 종교단체, 민간운동단체, 민간주택건설업체 등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전개될 필요가 있다.

(2)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의 구조개편

고령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젊은 노동인구의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의 개편과 인구고령화로 인하여 새로이 창출되는 산업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노동집약적 산업보다는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산업과 금융산업 등에 초점을 맞추어 경제발전이 지속되도록 한다. 둘째, 고령사회에서는 실버산업과 같은 고령친화산업이 각광을 받게 되어 새로운 사업기회가 창출되므로 이를 위한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에서는 인프라구축, 재정지원 등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3) 양질의 충분한 노동력 확보

향후 한국사회에서는 부족한 노동력은 피할 수 없는 실정에 있으므로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는 적극적 이민정책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산연령인구 집단, 가임여성층의 이민을 보다 능동적으로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기업 스스로 고령사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모색하는 자세도 필요하며, 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⁶⁾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조기퇴직을 금지하고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노동시장에서 조기에 퇴출되는 관행을 철폐시켜야 할 것이며,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회의 확대와 함께 피크타임제와 같은 생산성과 연계한 임금제도의 도입이 요구된다. 둘째, 퇴직한 중·고령자가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이들을 고용하는 기관에 대해서 인건비를 일부지원하고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부담을 경감한다. 셋째, 여성인력의 경제활동참여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취업직종을 개발하고 이에 알맞은 직업교육을 실시하며,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근무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한다. 넷째, 노인인력을 사회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투입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인인력 자질향상을 위한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단순노동이 아닌 전문성을 가진 사회적 일자리를 적극 개발하며, 궁극적으로 노후소득보장이 될 수 있는 수준의 급여가 보장되도록 한다. 다섯째, 중국, 몽고, 일본 등에 거주하고 있는 동북아 해외동포를 국내 노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제도를 개선하여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직업활동을 보장한다. 여섯째, 제3세계의 우수한 해외근로자들이 산업연수 및 직업훈련 등을 통해 제한된 직종에 한하여 국내에서 중장기적으로 합법적 취업이 가능토록 제도적 뒷받침을 구축한다.

(4) 사회보장제도 개혁과 민간보험제도 도입

고령사회의 도래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로는 국민연금제도와 건강보험제도가 있다. 특히, 이들 제도는 전술한 바와 같이 제도의 내재된 문제점과 급격한 노인인구 증가로 인하여 제도의 근본취지를 살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 하에서 제도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국민연금제도는 낮은 각출료와 고급여 구조로 인하여 재정불안정이 예고

- 6) 미국에서는 중·고령자에 대한 인식이 매우 긍정적이며, 유연한 노동시장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연령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이 금지되어 있음. 과거 높은 실업률로 인하여 중·고령자의 조기퇴직을 권유하던 유럽국가에서도 최근에는 중·고령 인력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음(이수희 외, 『고령화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 II』, 한국경제연구원, 2005).

되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혁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고급여 구조를 저급여 구조로 변화되어야 한다.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족한 노후소득분은 퇴직연금제도와 사적연금제도의 효과적 운영에 의하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건강보험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 이의 기본방향은 사회적 책임과 개인적 책임의 균형, 규제와 시장 원리의 조화, 그리고 재원의 다원화라고 하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층보장시스템을 구축하고 생애주기별 민간의료보험과 노인요양보험제도를 활성화 시키고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방안이 적극 추진될 필요가 있다.

(5) 교육부문의 구조조정과 외국유학생의 적극적 유치

출생아의 감소는 학령인구의 감소로 연결되어 기존 교육시설과 교사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 전망된다. 이미 2003학년도 입시에서 전국 199개 4년제 대학에서 입시정원의 9.4%(35,681명)가 미달하였고, 일부 대학들은 이미 통폐합되었으며, 현재도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을 불문하고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지역별 인구를 감안하여 초·중·고등학교 및 교사와 대학교 및 교수의 수급계획을 재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1년 앞당기고, '6-3-3-3'의 현행 학제를 1년 단축하여 노동시장의 진입연령을 현재보다 2~3년 앞당기는 방안을 적극 강구한다. 셋째, 외국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한국 유학생의 국내대학 진학이 증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6) 전역예정 현역병·장교의 사회적응교육 강화

국방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전역을 앞둔 현역병과 현역장교에게 6개월 이상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하여 전역 후 즉각적으로 학교생활과 노동시장 진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새로운 직장을 찾아야 하는 경우에는 적성에 맞는 직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알맞은 직업훈련과 시험준비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고령사회 도래 지연을 위한 방안

고령사회의 도래를 지연하기 위한 방안은 국외로부터 젊은 인구를 유입하고 출산율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젊은 국내·외 인력의 국내 정착 지원

젊은 국내·외 인력을 국내에 정착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젊은 해외인력을 유입하기 위해 이민결혼가족의 확대와 정착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한다.⁷⁾ 둘째, 해외로 나가는 젊은 국내인력을 감소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는 방안을 병행하여 추진한다. 셋째, 국내에서 유학한 외국유학생이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각종 우대혜택을 준다.

(2) 출산율 회복정책의 강화

주요 저출산 국가를 조명해 보면, US\$12,000~14,000에서의 출산율은 덴마크가 1.40명으로 가장 낮았고, 독일과 룩셈부르크가 1.42명이었으며, 그 외의 국가는 1.66~1.80명 수준으로 높았다. 그렇지만 한국사회는 동일한 수준의 국민소득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1.2명 전후의 매우 낮은 수준으로 저하되었음은 정책을 추진하는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출산율 회복정책의 우선순위 결정에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 아울러 선택된 정책에 대한 집중적 투자가 과감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선정책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장가정에서의 양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결혼·임신·출산에 기인되는 여성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며, 남성 출산휴가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 부부가 자녀양육에 함께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양성평등적 가족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에 남편과 부인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교육기관에서의 교육홍보가 효과적일 것이며, 언론방송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된다.

둘째, 결혼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비자발적 미혼상태에 있는 남녀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거시적 차원에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결혼을 앞둔 미혼남녀의 취업과 직장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결혼비용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 내에서 경비에 대한 세제감면을 하여 결혼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 이에 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항목을 기준으로 결혼비용의 세제감면 및 대출지원,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자금대출 및 임대아파트 우선분양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가족친화적 사회제도 및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임신·출산부부의 정시 출·퇴근제 정착으로 초과근무로 인한 과로를 예방하고, 아울러 부분근무제도, 시차 출·퇴근제, JOB SHAREING 제도 등 탄력 근무제를 도입하고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체 직장여성에게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제도의 완전정착 및 내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이들 제도의 정착을 위해 대체고용의 사회부담, 급여의 현실화, 원직복귀 보장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자녀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강화한다. 이는 양육비 지원제도와 양육비 부담경감방안을 의미한다. 양육비 지원제도는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며, 자녀수에 따라 현금 및 현물을 지원하는 다양한 형태의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이 바람직하다. 양육비 부담경감방안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핵심이며, 특히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역아동센터의 설립을 확충하고, 내실화를 기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이며, 아울러 자녀양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취학전 아동의 의료비 본인부담금 경감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7) 이민결혼가족의 여성이민자는 출산율이 높은 제3세계 국가의 국민이므로 출산수준의 변화 추이와 장래 인구추계에 기초하여 연도별 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됨.

5. 결 론

인구변동지표 중 출산율은 서구 선진국의 경우보다 낮은 수준에 있으며, 회복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군다나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젊은 미혼남녀의 가치관이 개인주의화 되는 경향이 있고 출산연령층인 가입여성인구가 감소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출산율 회복정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고령사회로의 급속한 이행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한 마디로 한국사회에서의 급속한 인구고령화 추세는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결국 고령사회에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하느냐가 관건일 것이다. 한국사회가 직면한 인구사회적 및 경제적 환경과 예측 가능한 지표를 면밀히 분석하여 연령에 따른 차별이 없는 사회와 국민 한명, 한명이 소중한 사회를 조성하고, 잘못된 사회제도를 개혁하며, 그리고 사회정책, 경제정책 등 모든 국가정책을 적절히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럼으로써 고령사회의 위기는 기회로 전환될 것이며, 서구 선진국의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않고 독자적인 국가발전의 모형이 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 